

여 “MB정부까지” vs 야 “靑·국토부도” 수사 범위 기사움

민주·국민의힘, LH 특검·부동산 전수조사 등 추진 방향 논의 선거 전 ‘부동산 적폐청산 이슈’ 주도권 잡기 사활...협상 ‘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 여야가 특검을 둘러싸고 기사움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나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특검 수사 시작은 재보선 이후로 예상되는 데다, 수사와 재판 기간 등을 고려하면 대선을 앞둔 연말까지도 이슈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협상 과정

에서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문제가 된 토지를 중심으로 거래와 자금 출처 등을 훑도록 하고, 전수조사는 별도 기관이 사 람을 중심으로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재보선 후보 등까지 살펴보도록 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특히 특검 수사 대상을 문제가 된 3기 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시기·지역 모두 대폭 늘리자고 요구 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대표는 이날 부산 최고위에서 엘시티 의

혹 관련 특검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고, 박영선 서울 시장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국동 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을 연상시키 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LH 사태로 수세에 몰려 있다가 특검을 통해 부 동산 적폐청산 이슈로 판을 키운 만큼 주도권을 놓 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LH가 ‘전국적 분노’ 라면, LCT는 ‘부산의 수처’이고 ‘비리’이다. 국민 들께서 LH 사태에 분노하시는 것은 공직자들의 도 덕적 해이 때문이다”면서 “우리는 LH든, LCT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의 오랜 치부인 부 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공직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바꿔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자는 것”이라며 “우리 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번 기회에 부동산 적폐를 뿌 리 뽑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의 동시 추진으로 민 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LH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 서를 제출하면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선거를 앞두고 터진 LH 사태로 여러 지지율 급락 의 반사 이익을 누릴 때 정국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틀 어주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특검과 관련해서도

수사 범위를 최대한 넓힌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하태경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공직자 싸그리 다 했으면 좋겠다. 시의원, 구의원, 지방자치단체 장”이라며 “이번 기회에 한 번 정치권에 대대적인 개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의 수사 대상이 넓어질수록 조치가 비 대해지고 수사의 신속성도 저해될 수 있으므로, 무 조건 범위를 확대하기보다 합리적인 균형을 찾아 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개발 까지 수사를 확대하지는 민주당의 의견에는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추경안 제안설명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 예비심사서 2조6천억 증가 전망

농가 지원·일자리·방역·예술분야 증액...국민의힘 반대에 진통 예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주 내로 예비심 사를 마치고, 18~19일 예결위에서 추경안 소관 정 부부처를 상대로 종합정책집의를 진행할 방침이 다. 이어 23~24일에는 예결위 소위를 열어 본격적 인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로 증액된 사업비 상당 부 분에 삭감이 이뤄지지만, 민주당도 농업·운수업 계 등은 지원을 늘리자는 입장이어서 최종 지원 규 모가 19조5천억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 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추경안이 제출된 10개 상임위 중 예비심사 를 마친 곳은 문체부와 고용노동부이다. 문체위는 전월 헬스 트레이너들에게도 고용지원 금을 지급하고 민간실내체육시설 인건비 지원을 확 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2459억원을 증액, 의결

했다. 산자위 소위에서는 산업부 소관 추경안에서 2202억원이, 중소기업부 소관에서 3917억원이 각 각 순증대 전체회의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특히 농해수위는 이날 농가 약 100만 가구에 100만원씩 보편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한다. 이 내용을 포함한 추경안이 그대로 의결되면 농해수위에서만 1조8천억원이 순증된다. 이들 3개 상임위 증액 규모만 합쳐도 2조6000억원이 넘는 다. 여기에 향후 일자리·방역 등 주요 추경 사업이 집중된 복지위와 환노위 심사를 거치면 추경 규모 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분야별 형평성과 재정여력 등을 따지 겠다는 방침이어서 예결위 논의가 진통을 겪을 전망 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국채발행 보다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수요를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전남도의회,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제 폐지안 채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농·어업분야 조세감 면 일몰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건의안이 전남도의회 에서 채택됐다. 1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박진권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 분야 조세감면 일몰기한 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이 지난 16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박 의원은 “농어업분야 조세특례 연장 조치는 매 년 반복되고 있으며, 조세특례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1~3년간 반복연장을 해주는 ‘땀집식 정책’ 은 일시적인 방편이고 소모적인 논쟁만을 불러일으 키는 조치”라고 건의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2021~2022년 일몰 도래 예정인 조세감면 항목 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관한 세액 감면, 영농 ·영여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업회사법 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 면, 농업·어업·임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감면 등이 있다. /김형호 기자 khh@

여의도 브리핑

신정훈·송갑석 ‘한전공대법 제정’ 野 설득 수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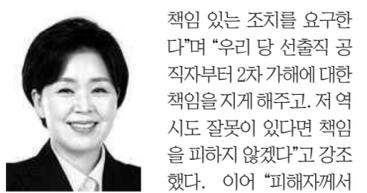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의 국회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과정에 더 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송갑석(서구갑) 국회의원의 활약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공대법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하면서 5·18민 주화운동 관련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광주·전남 주요 현 안 법안 처리는 대부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사기업 특혜’ 논란 등으로 가장 골치를 앓던 한전공대법은 지난 16일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찬반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 면 대학 토지를 무상 기부한 건설사(부영그룹) 가 특혜를 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이 지 역 의원들은 부영그룹에 대한 ‘추가이익 환수 방 안’을 들고 나와 설득에 나선 끝에 야당 의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날 소위에서 신의 원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차분한 어조로 답변 을 하며, 동의를 구했다. 17일 신정훈 의원은 “대표발의자로서 피가 마 르는 심정이었었는데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다”며 “3월 중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고 본 격적인 설립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 지 긴장하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도 야당 간사 등을 통해 법 통과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물밑 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송 의원은 “지역 발 전을 위한 필수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힘을 모 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공대법은 오는 18일 전체회의 의결 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양향자 “서울시장 보선, 성폭력 2차 가해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서구을) 국회의원은 17 일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우리 민주당의 잘못으 로 생긴 선거”라고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인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 력 피해자께서 오늘 공개 석상에 나서셨다”면서 “저는 사건 초기 ‘피해 호소인’이라는 매우 부적 절한 표현에 동의 했다. 저의 잘못이다”고 사과했 다. 이는 민주당이 이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 추행 사건 피해자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특히 양 의원은 “피해자에 이뤄지고 있는 2차 가해 역시 우리 당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 민주당 의 최고위원으로서 2차 가해에 대한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다”며 “우리 당 선출직 공 직자부터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주고, 저 역 시도 잘못이 있었다면 책임 을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 했다. 이어 “피해자께서 겪은 피해 사실은 그 누구 도 부정할 수 없다.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 정한 사실이다. 사실에 도전하는 행위는 당이 면 정 나서서 엄단해야 한다”면서 “피해자께서 그 엄 정한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음에도 ‘용서하고 싶 다’고 말씀했다. 어떤 말로도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

오피스텔, 신축부지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 ▶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 가능
-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7㎡(구. 14평)
- ▶ PF 28억 확정, 지하 1층 공사 중
- ▶ 매매 - 21억원, 조정가
- 중개환영. 010-3605-5000

토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상가, 다가구 및 주택용지 ※ 목표납액 준주거, 담양양리 주거2종

- (1)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광제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답 4220㎡(1,276평) 매 ㎡ 6십5만원
- (2) 무안군 삼암읍 남악리 준주거지 롯데마트앞 사거리코너 3만여세대 아파트 핵심상권 1천9평 매75억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 (1) 영암읍 황승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간 35분 4차 국도 근접, 미물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급매
-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광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급매
-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층 다수 자생, 생약재배 적합 농가 주택가 ㎡ 5천원 급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종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심홀플러스 길 건너면 동광주빌딩 내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회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